국토연구원	보 도 자 료
작성	주택·토지연구본부 이길제 부연구위원(044-960-0296)
배포	홍보출판팀 이유설 행정원(044-960-0443)
보도일시	■ 즉시 보도 가능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6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방향』**에서 인구, 경제, 기술, 환경·자원, 사회·정치 분야의 메가트렌드를 검토한 후 파생되는 주거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주거의식을 조사했다.

□ 인구 분야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경제 분야의 저성장과 빈부격차 심화, 기술 분야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이버 의존도 증가, 환경·자원 분야의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신종 감염병 등 보건문제와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사회·정치 분야의 개인주의 강화와 사회적 양극화 등이 분야별 주요 메가트렌드로 전망된다.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주거의식을 조사한 결과, **미래에 가장 중요한 주거기능은 가족과의 생활 및 휴식 공간 외 복합적 기능 공간과 친환경적 공간**이 라는 응답이 많았고, **미래에 주거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주거가치는 건강성, 안전성, 쾌적성**의 순으로 많이 응답했다.

□ 또한 **현재 주거복지 수준은 다른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거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다수(63.8%)**를 차지했다.

- ○ 적절한 주거복지 대상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득 하위 20% 이하'(21.9%), '전 국민 대상'(19.9%), '소득 하위 80% 이하'(17.6%)의 순으로 응답

□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세입기반 약화를 고려하여 주거복지 대응전략 수립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주거복지 대상·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 ○ **(주거지원)** 빈곤, 질병, 재난·재해, 고독 등의 위험에도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강화
- ○ **(주택의 물리적 환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택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실현하며, 단열, 환기, 소음 등 주택성능 강화 및 주택 관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 **(주거유형 및 공급)**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니즈에 부합하도록 주거입지, 주거유형, 주거서비스를 차별화한 다양한 주택의 개발 및 공급으로 주거선택권을 강화
- ○ **(주택배분)**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과 실수요자에 대한 차입제약 완화, 주택연금과 같은 소득보장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주택자산 형성과 활용 지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이유설 행정원(☎044-960-0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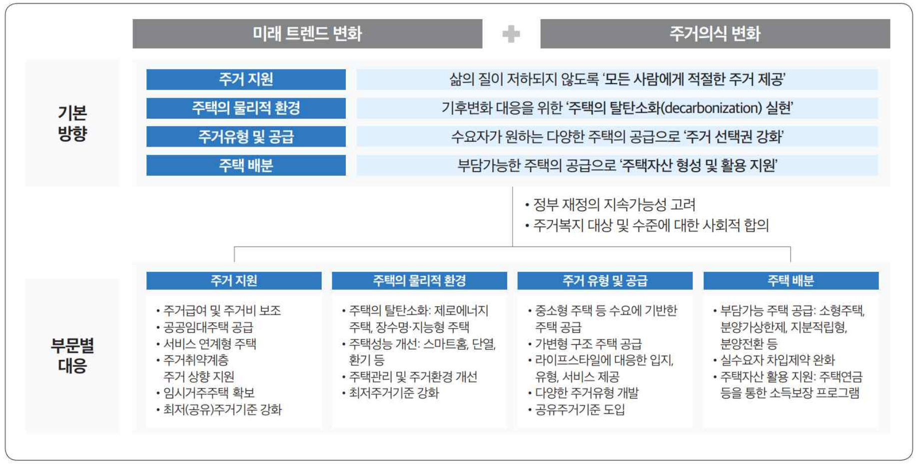
그림 4 미래 트렌드 및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방향